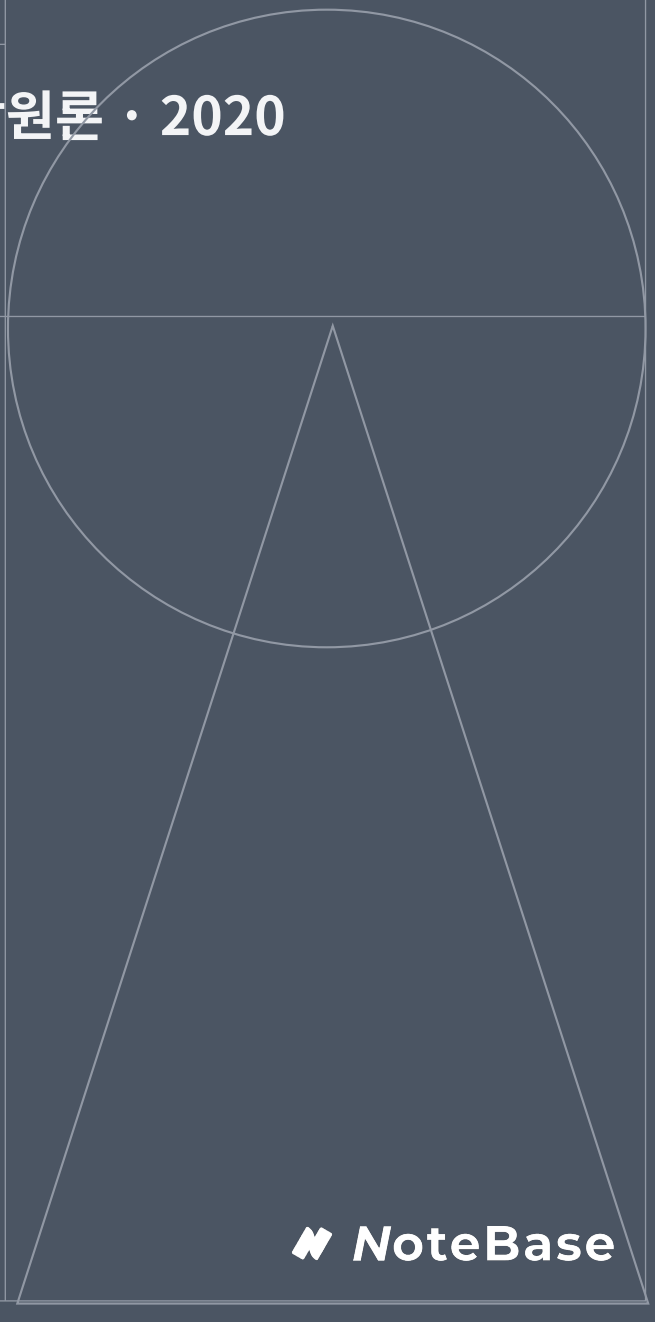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0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0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0**

**문 1.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의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구매는 고정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음(-)의 값을 갖는 재고투자는 해당 시기의 GDP를 감소시킨다.

③ 신축 주거용 아파트의 구매는 고정투자에서 제외되고 소비지출에 포함된다.

④ 재고투자는 유량(flow)이 아니라 저량(stock)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민소득계정에서 고정투자와 재고투자의 성격, 그리고 소비지출과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정투자는 생산에 여러 기간 사용되는 설비·건물·소프트웨어 등을 새로 취득하는 지출이다. 재고투자는 일정 기간 재고자산이 증감한 금액으로, 투자지출의 한 항목인 유량이다. 신축 주택의 구매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고정투자에 포함되고, 기존 주택의 거래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생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장기간 생산활동에 쓰이는 무형 고정자산이므로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포함된다'이다.
② O: 재고투자는 재고의 증감으로 측정된다. 재고가 줄어 재고투자가 음(-)이면 지출 측면 GDP의 투자 항목을 그만큼 줄이므로 해당 시기의 GDP를 감소시킨다.
③ X: 신축 주거용 아파트는 새로 생산된 주거용 건물이므로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고정투자에서 제외되고 소비지출에 포함된다'이며, 올바르게는 '고정투자에 포함되고 소비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다.
④ X: 재고 자체의 보유량은 저량이지만, 재고투자는 일정 기간 재고의 변화액이므로 유량이다. 틀린 표현은 '저량'이며, 올바르게는 '유량'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재고와 재고투자를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드는 선지이다. 재고는 특정 시점의 보유량인 저량이고, 재고투자는 그 보유량의 기간 중 변화인 유량이다. 또한 ③에서는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 거래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에 여러 기간 쓰이는 새 설비·건물·소프트웨어의 취득은 고정투자로 분류한다. 재고는 '보유량'이면 저량, '증감액'이면 재고투자라는 유량으로 판단한다. 새로 생산된 주택은 소비가 아니라 고정투자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투자=새 생산설비·건물·소프트웨어, 재고투자=재고의 변화액, 신축주택=고정투자이다.

NoteBase

**문 2.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케인즈는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총수요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② IS-LM 모형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케인즈에 의하면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정책은 효과를 갖지 않는다.

④ 재정정책은 내부시차보다 외부시차가 길어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과 재정정책·통화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 및 정책시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케인스 경제학은 총수요의 변동이 생산·고용 및 경기변동을 좌우한다고 본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조세를 직접 조정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며, 통화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거쳐 투자·총수요에 영향을 준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으며,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다.

**선지별 해설**

① O. 케인스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을 총수요, 특히 소비·투자 등 유효수요의 변동에서 찾았다.

② X. 틀린 표현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이다. 실제로는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IS-LM 모형에서도 확장적 통화정책은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소득과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

③ X. 틀린 표현은 '재정정책은 효과를 갖지 않는다'이다. 실제로 케인스는 불황기에 정부지출 확대나 감세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④ X. 틀린 표현은 '외부시차가 길어서'이다. 실제로 재정정책은 입법·예산편성 등으로 내부시차가 긴 반면, 집행되면 정부지출 등이 총수요에 직접 작용하므로 외부시차는 비교적 짧다.

**오답 포인트**

②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부정하고, ③은 케인스의 적극적 재정정책론을 반대로 서술한다. ④는 재정정책의 긴 내부시차와 통화정책의 긴 외부시차를 서로 바꾼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케인스가 나오면 '총수요 변동'과 '불황기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먼저 연결한다. 정책시차는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으며, 통화정책은 그 반대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케인스는 총수요, 재정은 안이 길고 밖이 짧다, 통화는 안이 짧고 밖이 길다.

NoteBase

**문 3. 갑은 사업안 A와 B를 고려하고 있다. 두 안의 성공 및 실패에 따른 수익과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위험은 분산으로 측정한다)**

| 구분 / 사업안 | 성공 | | 실패 | |
|---|---|---|---|---|
| | 확률 | 수익(만 원) | 확률 | 수익(만 원) |
| A | 0.9 | +100 | 0.1 | +50 |
| B | 0.5 | +200 | 0.5 | −10 |

ㄱ. A안의 기대수익은 95만 원이다.

ㄴ. B안의 기대수익은 95만 원이다.

ㄷ. 갑이 위험을 회피하는(risk averse) 사람인 경우 A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ㄹ. A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은 B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보다 더 크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 사업안의 기대수익과 분산을 계산하여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안: 성공 확률 0.9에서 100만 원, 실패 확률 0.1에서 50만 원이다.
B안: 성공 확률 0.5에서 200만 원, 실패 확률 0.5에서 -10만 원이다.
두 안의 기대수익을 먼저 비교한 뒤, 위험은 각 수익이 기대수익에서 벗어난 정도의 제곱평균인 분산으로 비교한다.

**사용할 공식**

기대수익은 $E(X) = \sum p_i X_i$이고, 분산은 $Var(X) = \sum p_i (X_i - E(X))^2$이다.
각 결과의 발생확률과 수익이 주어졌으므로, 확률가중평균으로 기대수익을 구하고 기대수익으로부터의 편차 제곱에 확률을 곱해 분산을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안의 기대수익은 $0.9 \times 100 + 0.1 \times 50 = 95$만 원이다. B안의 기대수익은 $0.5 \times 200 + 0.5 \times (-10) = 95$만 원이다.
A안의 분산은 $0.9(100-95)^2 + 0.1(50-95)^2 = 0.9 \times 25 + 0.1 \times 2025 = 225$이다.
B안의 분산은 $0.5(200-95)^2 + 0.5(-10-95)^2 = 0.5 \times 11025 + 0.5 \times 11025 = 11025$이다.
따라서 두 안의 기대수익은 같고, 위험은 A안이 더 작다. 위험회피자는 같은 기대수익이라면 분산이 작은 A안을 선호한다.

**선지 판단**

① O: ㄱ, ㄴ, ㄷ만 옳다. A안과 B안의 기대수익은 모두 95만 원이고, 분산은 A안이 225로 B안의 11,025보다 작다. 따라서 위험회피자는 A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② X: ㄹ이 틀렸다. ‘A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은 B안보다 더 크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A안의 분산이 B안보다 더 작다.
③ X: ㄹ이 틀렸다. ‘A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은 B안보다 더 크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A안의 위험이 더 작다.
④ X: ㄱ이 빠지고 ㄹ이 포함되어 틀렸다. ㄱ은 A안의 기대수익이 95만 원이라는 옳은 설명이고, ㄹ의 ‘A안의 위험이 더 크다’는 표현은 ‘A안의 위험이 더 작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A안은 실패 시에도 50만 원의 수익을 얻지만 B안은 실패 시 -1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 기대수익이 같다는 사실만 보고 위험도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기대수익에서의 편차가 B안에서 훨씬 크므로 분산도 B안이 더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률과 수익이 제시되면 각 안의 기대수익을 먼저 계산하고, 기대수익이 같으면 $\sum p_i(X_i - E(X))^2$로 분산을 비교한다. 위험회피자는 같은 기대수익 아래에서 분산이 더 작은 안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수익이 같으면 위험회피자: 분산이 작은 안을 선택한다.

NoteBase

**문 4. 미국산 연필은 1달러, 중국산 연필은 2위안, 미국과 중국의 화폐 교환비율은 1달러당 5위안이다. 이때 미국 연필당 중국 연필로 표시되는 실질환율은? (단, 미국산 연필과 중국산 연필은 완벽하게 동일하다)**

① 0.1

② 0.4

③ 2.5

④ 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명목환율로 미국 연필의 가격을 위안화로 바꾼 뒤,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중국 연필의 수를 구하는 실질환율 문제이다.

**조건 정리**

미국 연필 가격은 1달러, 중국 연필 가격은 2위안이다. 명목환율은 1달러당 5위안이다. 구하려는 값은 미국 연필 1자루가 중국 연필 몇 자루와 같은가이다.

**사용할 공식**

중국 연필로 표시한 미국 연필의 실질환율은 E P_미국 / P_중국이다. 여기서 $E$는 달러당 위안화 수이다. 미국 연필 가격을 먼저 위안화로 환산해야 두 나라 연필 가격의 단위가 같아진다.

**계산 과정**

1. 미국 연필 1자루의 위안화 가격은 5 위안/달러 × 1 달러=5 위안이다.
2. 이 5위안으로 중국 연필을 5 위안 / 2 위안=2.5자루 살 수 있다.
3. 따라서 미국 연필 1자루는 중국 연필 2.5자루와 같은 가치이므로 실질환율은 2.5이다.

**선지 판단**

① X. 0.1은 1/(5 × 2)처럼 환율의 방향을 뒤집고 가격을 곱한 값으로, 미국 연필의 위안화 가격을 중국 연필 가격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0.1'은 '2.5'로 고쳐야 한다.
② X. 0.4는 2/5로 계산한 역수이며, 중국 연필 1자루를 미국 연필로 표시한 값에 해당한다. 문제는 미국 연필을 중국 연필로 표시하므로 '0.4'는 '2.5'로 고쳐야 한다.
③ O. 미국 연필의 위안화 가격 5위안을 중국 연필 가격 2위안으로 나누면 5/2 = 2.5이므로 옳다.
④ X. 10은 환율 5와 중국 연필 가격 2를 곱한 값으로, 교환 가능한 중국 연필 수를 구할 때 필요한 나눗셈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10'은 '2.5'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0.4처럼 가격의 나눗셈 순서를 바꾸면 실질환율의 표시 방향도 반대가 된다. ‘미국 연필당 중국 연필’이라는 단위를 먼저 확인하면 5위안을 2위안으로 나누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환율 문제는 먼저 기준 재화의 가격을 상대국 통화로 환산하고, 그 값을 비교 대상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다. 마지막에는 결과의 단위가 ‘기준 재화 1단위당 상대국 재화 몇 단위’인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미국 재화 1개를 중국 재화로 표시하면 ‘달러 가격 × 위안/달러 ÷ 위안 가격’이다.

NoteBase

**문 5. 커피에 대한 수요함수가 $Q^d = 2{,}400 - 2P$일 때, 가격 $P^*$에서 커피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frac{1}{2}$이다. 이때 가격 $P^*$는?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400

② 600

③ 800

④ 1,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수요함수에서 특정 가격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구해 가격 $P^*$를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수요함수는 $Q^d = 2,400 - 2P$이다. 구할 조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이 1/2가 되는 가격 $P^*$이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_d = (dQ^d/dP) \cdot (P/Q^d)$이다. 수요함수의 기울기 $dQ^d/dP = -2$와 해당 가격에서의 가격·수요량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dQ^d/dP = -2$이므로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E_d| = 2P/(2,400 - 2P) = P/(1,200 - P)$이다.
$|E_d| = 1/2$를 대입하면 $P/(1,200 - P) = 1/2$이다.
$2P = 1,200 - P$, 따라서 $3P = 1,200$이므로 $P^* = 400$이다.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P^* = 400$이므로 옳다.
② X. $P = 600$이면 $|E_d| = 600/(1,200 - 600) = 1$이다. 틀린 표현 '600' → 올바르게는 '400'이다.
③ X. $P = 800$이면 $|E_d| = 800/(1,200 - 800) = 2$이다. 틀린 표현 '800' → 올바르게는 '400'이다.
④ X. $P = 1,000$이면 $|E_d| = 1,000/(1,200 - 1,000) = 5$이다. 틀린 표현 '1,000' → 올바르게는 '400'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함수의 기울기 $-2$만으로 탄력성을 $-2$라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가격탄력성은 기울기에 $P/Q^d$를 곱한 값이므로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②의 600은 탄력성이 1인 단위탄력성 가격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함수 $Q = a - bP$에서는 먼저 $|E_d| = bP/(a - bP)$를 세운 뒤, 문제에서 제시한 탄력성 절댓값과 같게 놓고 $P$를 푼다.

### 암기 포인트

선형 수요의 중점에서는 $|E_d| = 1$이고, 중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비탄력적이며 높은 가격에서는 탄력적이다.

NoteBase

**문 6. 제품 A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며, 수요곡선은 $Q^d = 150 - 5P$이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갑 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MR = -\frac{2}{5}Q + 30$, 한계비용은 20이다. 갑 기업이 제품 A에 대한 독점기업이 되면서, 한계비용은 22가 되었다. 독점에 의한 사회적 후생 손실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30

② 60

③ 90

④ 12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 균형과 독점 균형의 생산량·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 = 150 - 5P$이고, 역수요곡선은 $P = 30 - \frac{1}{5}Q$이다. 완전경쟁 때는 $MC = 20$이므로 가격이 20이고, 독점 때는 $MC = 22$이다.

**사용할 공식**

독점으로 줄어든 거래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선 사이 삼각형의 면적이다. 이 문항에서는 완전경쟁 균형 $P = 20,\ Q = 50$과 독점 균형의 수량 차이를 이용해 밑변과 높이를 구한다.

**계산 과정**

1. 완전경쟁에서는 $P = MC = 20$이므로 $Q = 150 - 5 \times 20 = 50$이다.
2. 독점에서는 $MR = MC$이므로 $-\frac{2}{5}Q + 30 = 22$, 따라서 $Q = 20$이다. 이때 가격은 $P = 30 - \frac{1}{5} \times 20 = 26$이다.
3. 거래량 감소분은 $50 - 20 = 30$, 가격 차이는 $26 - 20 = 6$이다. 따라서 후생 손실은 $\frac{1}{2} \times 30 \times 6 = 90$이다.

**선지 판단**

① X: 30은 완전경쟁 생산량 50과 독점 생산량 20의 차이일 뿐, 삼각형 면적 계산에서 높이 6과 $\frac{1}{2}$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30 → 올바르게는 90이다.
② X: 60은 거래량 감소분 30에 가격 차이 6을 곱한 180의 일부이지만, 후생 손실 삼각형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한 값이 아니다. 60 → 올바르게는 90이다.
③ O: 거래량 감소분 30과 가격 차이 6으로 만든 삼각형 면적은 $\frac{1}{2} \times 30 \times 6 = 90$이다.
④ X: 120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선 사이의 후생 손실 삼각형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120 → 올바르게는 9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독점의 사회적 후생 손실은 단순히 거래량 감소분 30이나 가격 차이 6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값을 밑변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따라서 반드시 $\frac{1}{2}$를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완전경쟁에서는 $P = MC$, 독점에서는 $MR = MC$로 각각 생산량을 구한다. 그다음 생산량 차이를 밑변, 독점가격과 완전경쟁가격의 차이를 높이로 하여 후생 손실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은 $P = MC$, 독점은 $MR = MC$, 독점의 후생 손실은 삼각형 면적이다.

NoteBase

**문 7. 물가와 국민소득의 평면에 그린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물가와 국민소득의 평면에 그린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진다.
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효과는 크다.
ㄷ.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유가 상승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총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급충격에 대한 재정·통화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총수요곡선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통화량이 줄고 이자율이 올라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 곡선이다. 소비·투자가 이자율에 덜 민감하면, 물가 변동이 이자율을 거쳐 지출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져 총수요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단기 총공급곡선은 물가 상승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는 우상향 곡선이다. 유가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감소를 함께 일으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X. 소비·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물가 변화에 따른 지출·국민소득의 반응도 작아진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파르게 된다. 틀린 표현은 '기울기는 작아진다'이며, 올바르게는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져 더 가파르게 된다'이다.

ㄴ. O. 이 경우 총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은 국민소득 감소보다 물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든다.

ㄷ. O. 소비·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으면 통화량 확대가 이자율을 낮추어 지출을 늘리는 경로가 약해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반면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유가 상승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데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① X. ㄱ이 틀리고 ㄴ만 옳다. 틀린 조합의 원인은 ㄱ의 '기울기는 작아진다'라는 표현이며, 총수요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② X. ㄱ이 틀리고 ㄷ만 옳다. 틀린 조합의 원인은 ㄱ의 '기울기는 작아진다'라는 표현이며, 총수요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③ O. ㄴ과 ㄷ만 옳은 조합이다.
④ X. ㄱ이 틀리므로 ㄱ·ㄴ·ㄷ 모두 옳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ㄱ의 '기울기는 작아진다'이며, 올바르게는 총수요곡선이 더 가파르게 된다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 '이자율에 덜 민감함'을 '총수요곡선이 완만해짐'으로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이자율 변동이 소비·투자에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물가 변화에 대한 국민소득의 반응은 작아지고, 총수요곡선은 더 가파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자율 변화가 지출에 전달되는 정도를 본다. 소비·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으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와 총수요의 물가 반응이 약해져 총수요곡선은 가파르고, 공급충격 때는 물가 변동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암기 포인트**

이자율 민감도 낮음 → 총수요 가파름 → 통화정책 약함·재정정책 상대적 강함이다.

NoteBase

**문 8.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총지급준비율이 작아져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콜금리보다 낮게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단기이자율은 상승한다.

④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급준비율·재할인율·공개시장조작·양적완화가 통화량과 단기이자율에 미치는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며, 인하되면 통화승수가 커진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며, 인하되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공개시장 국채 매입과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해 본원통화와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단기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묶어 두어야 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과 예금창출의 여지가 커져 통화승수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② O. 재할인율을 콜금리보다 낮게 인하하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대출·신용공급을 늘려 통화량 증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 단기이자율은 보통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단기이자율은 상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단기이자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이다.

④ O.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매도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 시중의 지급준비금과 통화량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본원통화 증가'와 '이자율 상승'을 결합한 것이 함정이다. 통화공급이 늘면 화폐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므로 단기이자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 압력을 받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은행의 정책이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지부터 판단한다.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국채 매입, 양적완화는 모두 확장적 정책이므로 통화량은 증가하고 단기이자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지준율 ↓ · 재할인율 ↓ · 국채 매입 · 양적완화 = 통화량 ↑, 단기이자율 ↓ 이다.

NoteBase

**문 9. 통화정책의 테일러준칙(Taylor rule)과 인플레이션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일러준칙을 따르는 정책당국은 경기가 호황일 때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경기가 불황일 때 이자율을 하락시켜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② 테일러준칙에서 다른 변수들은 불변일 때 정책당국이 목표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면 정책금리도 높여야 한다.

③ 인플레이션목표제는 미래 인플레이션의 예측치에 근거하며, 테일러준칙은 후향적(backward-looking)이어서 과거 인플레이션을 따른다.

④ 인플레이션목표제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므로 중앙은행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일러준칙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변할 때 정책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인플레이션목표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테일러준칙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보다 높거나 산출량이 잠재수준보다 높을수록 정책금리를 높이는 준칙이다. 인플레이션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수치화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공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테일러준칙은 관측된 현재·과거의 물가 및 경기 상황에 반응하는 후향적 성격이 강하고, 인플레이션목표제는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을 중시하는 선행적 성격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기 호황으로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을 웃돌면 테일러준칙은 정책금리를 올리고, 불황이면 금리를 내려 총수요와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면 정책금리도 높여야 한다"이다. 다른 변수가 일정하면 목표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목표치의 격차를 줄이므로, 테일러준칙상 정책금리는 낮아지는 방향이 맞다.

③ O. 인플레이션목표제는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을 중시하는 선행적 정책운용이며, 테일러준칙은 관측된 인플레이션율과 산출량 갭에 반응하는 후향적 성격으로 설명된다.

④ O. 수치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목표는 중앙은행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제공하므로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목표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뒤바꾸는 함정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리지만,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올리면 실제 물가와 목표 물가의 괴리가 작아져 금리 인상 압력은 약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일러준칙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산출량 갭,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구분한다. 실제 물가나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는 상승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율만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갭이 축소되어 금리는 하락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제 물가·경기 과열은 금리 인상, 목표 물가 상향은 인플레이션 갭 축소이다.

NoteBase

**문 10.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이 완전대체재일 경우 유동성 프리미엄이 0에 가까워지더라도 양(+)의 값을 갖는다.

② 기대이론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의 단기이자율이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주체들이 많을수록 수익률곡선은 평평해진다.

③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항상 양(+)의 값을 갖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④ 미래에 단기이자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에서 기대이론과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전제하는 채권의 대체성 및 유동성 프리미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대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이 완전대체재라고 보며, 장기이자율은 현재와 예상 미래 단기이자율의 평균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 경우 만기별 유동성 프리미엄은 없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장기채권 보유의 가격변동 위험 등을 보상하기 위해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그 프리미엄이 커진다고 본다.
기대이론은 예상 단기이자율의 움직임이 수익률곡선을 결정하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여기에 만기별 양(+)의 프리미엄이 더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만기가 다른 채권이 완전대체재라는 전제는 기대이론의 전제이다. 이때 유동성 프리미엄은 양(+)의 값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0이다. 틀린 표현은 '0에 가까워지더라도 양(+)의 값을 갖는다'이며, 올바르게는 '완전대체재이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0이다'이다.
② O. 현재와 미래의 단기이자율이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주체가 많으면 미래 단기이자율의 기대치가 현재와 같아진다. 기대이론에서 장기이자율도 이에 맞추어져 수익률곡선은 평평해진다.
③ O.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장기채권일수록 가격변동 위험과 유동성 손실 가능성이 커 보상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양(+)이고 만기와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④ O. 미래 단기이자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대이론상 장기이자율은 현재 단기이자율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수익률곡선은 우하향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은 '완전대체재'라는 기대이론의 전제와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의 전제를 섞어 놓은 선지이다. '0에 가깝다'는 표현에 끌리지 않고, 완전대체재이면 프리미엄이 0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만기별 채권이 완전대체재인지 확인한다. 완전대체재이면 기대이론으로서 유동성 프리미엄은 0이다.
반대로 장기채권의 위험 보상을 따지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서 만기가 길수록 양(+)의 프리미엄이 커진다.
이후 예상 미래 단기이자율이 현재보다 높으면 우상향, 같으면 평평, 낮으면 우하향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완전대체재·기대이론은 프리미엄 0, 장기채권 위험보상·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만기와 함께 양(+)의 프리미엄 증가이다.

NoteBase

**문 11. 이자율 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① 외국의 명목이자율과 기대환율이 고정되었을 때 자국의 명목이자율이 증가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② 외국의 명목이자율과 자국의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었을 때 기대환율이 증가하면 외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③ 양국의 생산물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

④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이자율은 항상 1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율평가설에서 자국통화 표시 환율, 명목이자율, 기대환율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자율평가설은 자국통화 자산과 외국통화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현재 환율이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환율이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면, 기대환율이 고정된 경우 자국 명목이자율 상승은 현재 환율 하락(자국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양국 명목이자율이 고정된 경우 기대환율 상승은 현재 환율 상승을 수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외국 명목이자율과 기대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국통화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수익률 균형을 위해 현재 환율은 하락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환율은 상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환율은 하락한다'이다.

② O. 양국 명목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대환율이 상승하면 외국통화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를 맞추기 위해 현재 환율도 상승하므로 외국통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③ X. 동일한 상품을 양국에서 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설명은 구매력평가설에 관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이자율평가설의 내용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구매력평가설에서는 동일 상품의 국가 간 가격이 환율로 조정된다'이다.

④ X. 이자율평가설은 명목이자율 차이와 기대환율 변동률의 관계를 설명한다. 실질이자율이 항상 1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실질이자율은 항상 1'이며, 올바르게는 '명목이자율 차이는 기대환율 변동에 의해 상쇄되어 기대수익률이 같아진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자국 이자율 상승과 환율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고, ③은 이자율평가설과 구매력평가설을 섞은 함정이다. ④의 '항상 1'처럼 이론이 보장하지 않는 절대적 표현도 틀린 단서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국통화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변화가 있으면 현재 외국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자국통화 자산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외국통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수익률 균형을 판단한다. 상품 가격의 국가 간 비교가 나오면 구매력평가설인지 먼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율평가설은 금융자산 수익률, 구매력평가설은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이론이다.

NoteBase

**문 12.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고용 재정적자(full-employment budget deficit) 또는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cyclically adjusted budget deficit)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반영하므로 경기순환 상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②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 조세 크기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할 때는 균형예산을 준칙으로 하고 법제화하여야 한다.

③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 흐름이 일정할 때 민간보유 국 · 공채는 민간부문의 순자산이 된다.

④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수준을 설정하거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환조정 재정수지, 조세평탄화, 리카도 대등정리의 성립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환조정 재정적자는 경기변동과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조세의 한계적 사회비용이 체증하면 시기별 세율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조세평탄화가 바람직하며, 매년의 균형예산을 뜻하지는 않는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소비자가 미래를 고려하고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부채무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반영"한다는 부분이다. 완전고용 재정적자 또는 순환조정 재정적자는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변동의 효과를 제거·조정한다. 따라서 현재 경기순환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라기보다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보는 지표이다.

② X.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 체증하면 같은 세수를 여러 시기에 나누어 조달해 세율 변동을 줄이는 조세평탄화가 도출된다. 틀린 표현은 "균형예산을 준칙으로 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매년 균형예산을 강제하기보다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 아래 조세 왜곡을 평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X. 리카도 대등정리에서는 국채 발행에 따른 현재의 감세가 미래의 증세를 뜻하므로 민간은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민간부문의 순자산이 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 흐름이 일정한 경우 국채는 미래 조세부담과 상쇄되어 민간 순자산을 늘리지 않는다.

④ O. 소비자가 근시안적이면 미래의 조세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면 현재 소비를 위해 차입·대출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리카도 대등정리의 전제가 깨지므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반영하는 실제 재정수지와 이를 제거한 순환조정 재정수지를 뒤바꾼 선지이다. ②는 조세평탄화를 매년 균형예산으로 바꾸어 놓았고, ③은 국채를 민간의 순자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리카도 대등정리와 반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환조정 재정수지에는 경기·자동안정화 효과가 제거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조세비용 체증 선지는 기간 간 세율 평탄화와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을 연결한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미래 조세를 고려하는지와 자본시장 접근이 완전한지를 성립 조건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순환조정은 자동안정화 효과를 뺀다. 조세비용 체증은 세율을 평탄화한다. 리카도 대등은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갑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0.1%로 인하했다. 이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에 하는 저축에 보관료가 발생할 것이다.

② 은행들은 가계나 기업에게 하는 대출을 확대할 것이다.

③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④ 기업의 투자자금이 되는 가계부문의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하는 금리를 낮추었을 때, 은행의 자금운용과 가계·기업의 저축·투자에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초과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이 중앙은행에 보관한 준비금이다. 이 준비금의 금리가 낮아지거나 음수가 되면 은행은 중앙은행에 자금을 보관할 유인이 줄고, 대출 등 다른 운용을 늘리려 한다. 금리 인하는 차입비용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반대로 저축의 수익률은 낮아지므로 가계저축은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초과지급준비금 금리가 -0.1%이면 은행은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데 사실상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저축성 보관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② O. 준비금 보관의 수익성이 낮아진 은행은 가계·기업 대출을 늘리려는 유인을 갖는다.

③ O. 금리 하락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춘다. 이에 따라 투자와 생산이 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저축이 증가'한다는 부분이다. 금리 인하는 저축의 이자수익을 낮추므로, 기업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는 가계저축은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올바르게는 '가계부문의 저축이 감소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③의 대출·투자 확대 효과만 보고 ④도 자금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대출 확대는 은행의 자금운용 변화이고, 저축은 가계가 금리수익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이므로 금리 인하 시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리 인하 문항에서는 차입자와 투자자는 유리해져 대출·투자가 증가하는지, 저축자는 이자수익이 줄어 저축 유인이 약해지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초과지급준비금 금리 인하는 은행의 준비금 보관보다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암기 포인트**

금리 인하: 대출·투자 확대, 저축 유인 약화이다.

NoteBase

**문 14. 공공사업 A에 투입할 100억 원의 자금 중에서 40억 원은 민간부문의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고, 60억 원은 민간부문의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다. 이 공공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은? (단,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은 각각 15.0%와 10.0%이다)**

① 11.5%

② 12.0%

③ 12.5%

④ 13.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사업 자금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에서 각각 전용될 때의 기회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자금은 100억 원이다. 이 중 민간투자에서 전용된 자금은 40억 원, 민간소비에서 전용된 자금은 60억 원이다. 민간투자에는 세전 수익률 15.0%를, 민간소비에는 세후 수익률 10.0%를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할인율은 자금의 원천별 기회비용을 그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투자에서 전용된 40억 원은 세전 수익률 15.0%만큼의 생산수익을 포기하게 하므로 세전 수익률을 적용한다. 소비에서 전용된 60억 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포기하는 세후 수익률 10.0%를 적용한다.

**계산 과정**

투자에서 전용된 비중은 40/100=0.4이고, 소비에서 전용된 비중은 60/100=0.6이다.
사회적 할인율=0.4×15.0\%+0.6×10.0\%=6.0\%+6.0\%=12.0\%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은 12.0%이다.

**선지 판단**

① X. 계산 결과는 12.0%이므로 11.5%는 가중평균값과 다르다. 틀린 표현: 11.5% → 올바르게는 12.0%이다.
② O. 민간투자분의 기회비용 6.0%와 민간소비분의 기회비용 6.0%를 합하면 12.0%가 된다.
③ X. 계산 결과는 12.0%이므로 12.5%는 가중평균값과 다르다. 틀린 표현: 12.5% → 올바르게는 12.0%이다.
④ X. 계산 결과는 12.0%이므로 13.0%는 가중평균값과 다르다. 틀린 표현: 13.0% → 올바르게는 12.0%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투자분과 소비분에 같은 수익률을 적용하거나, 두 수익률을 단순평균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에서는 투자분에는 세전 15.0%, 소비분에는 세후 10.0%를 적용한 뒤 자금 비중 40%와 60%로 가중평균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적 할인율 문제는 먼저 자금이 투자와 소비 중 어디에서 전용되었는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투자분에는 세전 수익률, 소비분에는 세후 수익률을 대응시킨 뒤 각 원천의 자금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

### 암기 포인트

투자 전용분은 세전 수익률, 소비 전용분은 세후 수익률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원천별 기회비용의 가중평균이다.

NoteBase

**문 15. 교역재인 자동차와 비교역재인 돌봄서비스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역재와 비교역재를 모두 포함한 표준적 소비바구니(consumption basket)는 자동차 1대와 돌봄서비스 10회로 구성된다)**

| 구분 / 국가 | 자동차 | | 돌봄서비스 | |
|---|---|---|---|---|
| | 1인당 생산량(대) | 가격 | 1인당 생산량(회) | 가격 |
| 갑 | 10 | 10 | 100 | 2 |
| 을 | 1 | 10 | 10 | 1 |

① 교역재만을 대상으로 한 갑국 통화와 을국 통화의 교환비율은 1:1이다.

② 표준적 소비바구니를 대상으로 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반영 환율은 갑국 통화 3단위에 대해 을국 통화 2단위이다.

③ 교역재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면 을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10이다.

④ 표준적 소비바구니를 대상으로 한 구매력평가 반영 환율을 적용하면 을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1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교역재만으로 계산한 환율과 교역재·비교역재를 함께 반영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구분하고, 그 환율로 1인당 GDP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국의 1인당 GDP는 자동차 10대×10 + 돌봄서비스 100회×2 = 300이다. 을국의 1인당 GDP는 자동차 1대×10 + 돌봄서비스 10회×1 = 20이다.
표준 소비바구니는 자동차 1대와 돌봄서비스 10회로 구성된다.

**사용할 공식**

교역재만의 환율은 같은 자동차 1대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한다. 구매력평가 환율은 같은 소비바구니의 가격을 비교하여 구한다.
소비바구니 가격은 갑국에서 $10 + 10 \times 2 = 30$, 을국에서 $10 + 10 \times 1 = 20$이다. 따라서 구매력평가 환율은 갑국 통화 3단위 대 을국 통화 2단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동차 가격은 두 나라 모두 10이므로,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은 1:1이다.
2. 자동차만의 환율 1:1로 을국의 GDP 20을 갑국 통화로 환산하면 20이다. 따라서 을국/갑국의 1인당 GDP 비율은 20/300 = 1/15이다.
3. 구매력평가 환율에서는 을국 통화 20단위가 갑국 통화 30단위와 같으므로, 을국의 1인당 GDP는 갑국 통화 기준 30이다. 따라서 비율은 30/300 = 1/10이다.

**선지 판단**

① O. 자동차는 교역재이고 양국에서 자동차 1대의 가격이 모두 10이므로,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은 갑국 통화 1단위 대 을국 통화 1단위이다.
② O. 표준 소비바구니 가격은 갑국 30, 을국 20이다. 비율을 3:2로 약분하면 갑국 통화 3단위 대 을국 통화 2단위가 된다.
③ X. 자동차만의 환율 1:1을 적용한 을국 1인당 GDP는 20이고, 갑국은 300이므로 비율은 1/15이다. 틀린 표현인 1/10은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했을 때의 비율이며, 올바르게는 갑국의 1/15이다.
④ O. 구매력평가 환율로 을국 GDP 20을 갑국 통화로 환산하면 30이다. 따라서 30/300 = 1/10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교역재만의 환율과 구매력평가 환율을 혼동한 선지이다. 교역재 환율에서는 을국의 GDP가 20으로 비교되지만, 비교역재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구매력평가에서는 30으로 환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비교 대상이 교역재만인지 표준 소비바구니 전체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해당 환율로 외화 GDP를 같은 통화로 환산한 뒤, 분자는 비교 대상 국가의 GDP, 분모는 기준 국가의 GDP로 두어 비율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교역재 환율은 같은 교역재의 가격, 구매력평가 환율은 같은 소비바구니의 가격으로 구한다.

NoteBase

**문 16. 상품 A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했다. 분석 결과로 $\beta_2$가 $-0.0321$로 추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 $\varepsilon$은 오차항이다)**

$$\ln Q^d = \beta_1 + \beta_2 \ln P + \varepsilon$$

① 가격 $P$가 1% 상승하면, 수요량 $Q^d$가 3.21% 감소한다.

② 가격 $P$가 1% 상승하면, 수요량 $Q^d$가 0.0321% 감소한다.

③ 가격 $P$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수요량 $Q^d$가 3.21% 포인트 감소한다.

④ 가격 $P$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수요량 $Q^d$가 0.0321% 포인트 감소한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그-로그 모형에서 설명변수의 계수가 탄력성을 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격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모형: $\ln Q^d = \beta_1 + \beta_2 \ln P + \varepsilon$
추정계수: $\hat{\beta}_2 = -0.0321$
구해야 할 내용: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이다.
주의할 조건: 로그-로그 모형의 계수는 퍼센트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포인트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 사용할 공식

로그-로그 모형에서는
$\beta_2 = \frac{\partial \ln Q^d}{\partial \ln P} \approx \frac{\%\Delta Q^d}{\%\Delta P}$
이므로 $\beta_2$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가격과 수요량이 모두 로그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가격 변화율은 1%이다.
2. 수요량의 변화율은 $\%\Delta Q^d \approx \hat{\beta}_2 \times \%\Delta P$로 계산한다.
3. 따라서 $(-0.0321) \times 1\% = -0.0321\%$이다. 즉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약 0.0321% 감소한다.

NoteBase

### 선지 판단

① X —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3.21% 감소한다는 설명은 계수 0.0321을 100배 크게 해석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수요량이 약 0.0321% 감소한다.
② O — $\hat{\beta}_2 = -0.0321$은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약 0.0321% 감소한다는 뜻이다.
③ X — '1%포인트 상승'과 '3.21%포인트 감소'는 모두 로그-로그 계수의 해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약 0.0321% 감소한다.
④ X — 계수는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약 0.0321%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 오답 포인트

함정은 0.0321을 3.21%로 잘못 환산하거나, 퍼센트 변화와 %포인트 변화를 혼동하는 데 있다. 로그-로그 모형의 계수는 이미 '설명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가'를 나타내므로 계수에 다시 100을 곱하지 않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모두 로그이면 해당 설명변수의 계수를 탄력성으로 읽는다. 계수의 절댓값이 변화율의 크기이고, 부호가 증가·감소의 방향을 결정한다.

### 암기 포인트

로그-로그 모형은 '1% 변화 → 계수만큼 % 변화'이며, 음의 계수는 반대 방향의 변화를 뜻한다.

NoteBase

**문 17. 주요 국제통화제도 또는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줄여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를 무너뜨리는 요인이었다.

② 1970년대 초 금 태환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미 달러화를 평가절상하면서 브레튼우즈체제는 종식되었다.

③ 1970년대 중반 킹스턴(Kingston)체제는 통화로서 금의 역할을 다시 확대하여 고정환율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④ 1980년대 중반 플라자(Plaza)협정으로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추진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킹스턴 협정과 플라자 협정의 내용, 그리고 금·달러·환율제도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 태환하고 다른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도이다. 킹스턴 협정은 금의 화폐적 역할을 축소하고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협정이다. 플라자 협정은 1985년 주요국이 협조하여 과대평가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기로 한 협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줄여'이다. 실제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유출이 국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달러의 금 태환 신뢰를 약화시켜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요인이 되었다.

② X. 틀린 표현은 '미 달러화를 평가절상하면서'이다. 실제로 1971년 미국은 금 태환을 정지하고 달러화를 평가절하했으며, 이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과정의 조치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금의 역할을 다시 확대하여 고정환율체제로의 복귀'이다. 실제로 킹스턴 협정은 금의 화폐적 역할을 축소하고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④ O. 1985년 플라자 협정은 미국 달러화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주요국이 외환시장에 협조 개입하여 달러화 평가절하를 유도한 협정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국제 유동성 공급과 금 태환 신뢰의 악화를 반대로 연결한 선지이다. ②는 달러화 평가절하를 평가절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③은 킹스턴 협정을 금·고정환율로의 복귀처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달러 연계와 고정환율, 킹스턴 협정은 금의 탈화폐화와 변동환율제 인정, 플라자 협정은 달러화 평가절하 유도로 구분한다. 협정의 방향이 금의 역할 확대인지 축소인지, 고정환율 복귀인지 변동환율 인정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킹스턴은 금의 퇴장·변동환율의 공식화, 플라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다.

NoteBase

**문 18. 갑국의 생산함수는 Y_갑 = A_갑L_갑^0.5K_갑^0.5, 을국의 생산함수는 Y_을 = A_을L_을^0.3K_을^0.7이다. 두 국가 모두 노동증가율이 10%, 자본증가율이 20%일 때, 두 국가의 총생산증가율을 같게 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각국의 총생산량, $A$는 각국의 총요소생산성, $L$은 각국의 노동량, $K$는 각국의 자본량이다)**

①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2% 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②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2% 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

③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4% 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④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4% 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성장회계식을 이용하여 두 나라의 요소투입 증가가 총생산증가율에 기여하는 정도와 필요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갑국의 노동·자본 소득분배율은 각각 0.5, 0.5이고, 을국은 각각 0.3, 0.7이다. 두 나라 모두 노동증가율은 10%, 자본증가율은 20%이다. 두 나라의 총생산증가율을 같게 만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를 구한다.

### 사용할 공식

생산함수 $Y = AL^{\alpha}K^{\beta}$의 성장률은 $g_Y = g_A + \alpha g_L + \beta g_K$이다. 각 생산요소의 지수가 그 요소 증가율에 곱해져 총생산증가율에 기여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 계산 과정

갑국의 요소투입 기여분은 $0.5 \times 10 + 0.5 \times 20 = 15\%$, 을국의 요소투입 기여분은 $0.3 \times 10 + 0.7 \times 20 = 17\%$이다.
따라서 g_Y,갑=g_A,갑+15, g_Y,을=g_A,을+17이다. 총생산증가율을 같게 하려면 g_A,갑+15=g_A,을+17이어야 하므로 g_A,갑=g_A,을+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갑국의 요소투입 기여분은 15%이고 을국은 17%이므로, 같은 총생산증가율을 위해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을국보다 2%포인트 높아야 한다.
② X. '2%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을국보다 2%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③ X. '4%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요소투입 기여분의 차이는 $17 - 15 = 2$%포인트이므로 올바른 차이는 2%포인트이다.
④ X. '4%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을국은 자본의 지수가 0.7로 갑국의 0.5보다 크고 자본증가율도 20%이므로 요소투입 기여분이 더 크다. 이 차이를 반대로 보거나,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 차이를 각각 더해 4%포인트로 계산하는 오류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의 지수에 각 요소의 증가율을 곱해 요소투입 기여분을 먼저 계산한다. 그 뒤 총생산증가율을 같게 놓고, 요소투입 기여분이 작은 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그 차이만큼 더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성장률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노동 기여분 + 자본 기여분이다. 요소 기여분이 작은 나라일수록 같은 성장률에 더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필요하다.

NoteBase

**문 19. 갑국의 생산함수는 $Y=[K(1-u)L]^{1/2}$이다. 자연실업률이 4%, 저축률, 인구성장률,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모두 10%일 때, 솔로우(Solow) 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생산량은? (단, Y는 총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u는 자연실업률이다)**

① 0.24

② 0.48

③ 0.72

④ 0.96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자연실업률을 반영한 1인당 생산함수와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조건으로 1인당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자연실업률은 $u=0.04$이므로 유효노동 비율은 $1-u=0.96$이다. 저축률은 $s=0.10$, 인구성장률은 $n=0.10$, 감가상각률은 $\delta=0.10$이다. 1인당 자본을 $k=K/L$, 1인당 생산량을 $y=Y/L$라고 둔다.

### 사용할 공식

생산함수 $Y=[K(1-u)L]^{1/2}$를 $L$로 나누면 $y=\sqrt{(1-u)k}$이다.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저축 $sy$가 인구증가와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투자 $(n+\delta)k$와 같으므로 $s\sqrt{(1-u)k}=(n+\delta)k$를 사용한다.

### 계산 과정

균제상태 조건은 $0.10\sqrt{0.96k}=0.20k$이다. $k>0$이므로 정리하면 $\sqrt{k}=\frac{0.10\sqrt{0.96}}{0.20}$이고, 따라서 $k^{*}=\frac{0.10^{2}\times 0.96}{0.20^{2}}=0.24$이다.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y^{*}=\sqrt{0.96\times 0.24}=\sqrt{0.2304}=0.48$이다.

### 선지 판단

① X: 0.24는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 $k^{*}$이다. 문제에서 구하는 1인당 생산량은 아니므로, 0.24 → 올바르게는 $y^{*}=0.48$이다.

② O: 균제상태 1인당 생산량은 $y^{*}=0.48$이므로 옳다.

③ X: 0.72는 $y=\sqrt{0.96k}$ 및 균제상태 조건을 만족하여 나온 값이 아니다. 0.72 → 올바르게는 0.48이다.

④ X: 0.96은 자연실업률을 뺀 유효노동 비율 $1-u$일 뿐 1인당 생산량이 아니다. 0.96 → 올바르게는 $y^{*}=0.48$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0.24는 계산 중 먼저 구해지는 $k^*$이므로, 이를 문제의 요구값인 $y^*$와 혼동하기 쉽다. ④의 0.96도 생산량이 아니라 실업을 제외한 노동 비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를 먼저 1인당 형태로 바꾸고, $sy = (n + \delta)k$의 균제상태 조건으로 $k^*$를 구한 뒤 반드시 생산함수에 다시 대입하여 $y^*$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제상태에서는 $sy = (n + \delta)k$이며, $k^*$와 $y^*$는 서로 다른 값이다.

NoteBase

**문 20.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갑과 을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청소하기'와 '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른 효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하기'를 선택할 때의 비용은 10이다. 갑과 을은 '보복'을 선택할 수 있다. '보복'은, 한 사람이 '청소하기'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쉬기'를 선택하면 '청소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은 그다음 주부터 몇 주의 '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복 기간이 종료되면, 둘은 다시 함께 청소하는 관계로 복귀한다. '쉬기'를 선택하는 유인을 줄이고 함께 청소하는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보복 기간의 최솟값은? (단, 표의 괄호에서 앞의 숫자는 갑의 효용, 뒤의 숫자는 을의 효용이다)**

| | | 을 | |
|---|---|---|---|
| | | 청소하기 | 쉬기 |
| 갑 | 청소하기 | (13, 13) | (11, 11) |
| | 쉬기 | (11, 11) | (2, 2) |

① 7주

② 8주

③ 9주

④ 10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한기간 보복전략에서 일탈로 얻는 당장의 추가 효용과 보복기간에 잃는 효용을 비교하여 협력을 엄격하게 유도하는 최소 보복기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함께 청소할 때 각자의 순효용은 13-10=3이다. 상대방만 청소할 때 쉬기를 택한 사람의 효용은 11이므로, 협력에서 일탈하면 당장 11-3=8만큼 더 얻는다. 보복기간에는 둘 다 쉬어 효용이 2가 되므로, 협력을 계속할 때의 효용 3보다 매주 1만큼 적게 얻는다. 구해야 할 값은 일탈의 순이득을 음(-)으로 만드는 보복기간의 최소 정수이다.

**사용할 공식**

보복기간을 $T$주라고 하면 일탈의 순이득은 다음과 같다.

일탈의 순이득=8-T× 1=8-T

쉬기를 선택할 유인을 없애고 협력을 엄격하게 선호하게 하려면 $8 - T < 0$이어야 한다. 이는 일탈의 당기 이득에서 보복기간의 총손실을 뺀 값이 음수여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협력 시 주당 순효용은 13-10=3이다.
2. 일탈한 주에는 11을 얻으므로 당기 일탈이득은 11-3=8이다.
3. 보복기간에는 매주 협력 때보다 3-2=1만큼 손해를 본다.
4. 따라서 $8 - T < 0$, 즉 $T > 8$이다.
5. 이를 만족하는 최소 정수는 $T = 9$이므로 최소 보복기간은 9주이다.

**선지 판단**

① 7주: X. 일탈의 순이득이 8-7=1로 양수이므로 쉬기를 택할 유인이 남는다. 틀린 값 7주가 아니라 최소 9주이다.
② 8주: X. 일탈의 순이득이 8-8=0이어서 협력과 일탈이 무차별하다. 쉬기의 유인을 엄격하게 줄여 협력을 선택하게 하려면 8주가 아니라 9주가 필요하다.
③ 9주: O. 일탈의 순이득이 8-9=-1이므로 일탈보다 협력이 유리해지는 최소 기간이다.
④ 10주: X. 일탈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최소기간이 아니다. 9주부터 이미 일탈의 순이득이 음수가 되므로 10주는 최소값이 아니라 9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8주의 경우 일탈이득과 보복손실이 같다는 이유로 곧바로 최소기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8주에는 두 선택이 무차별할 뿐 협력을 엄격하게 선호하지 않는다. 문제의 '쉬기를 선택하는 유인을 줄이고 협력 관계를 지속'한다는 조건에 따라 부등호를 $T \geq 8$이 아니라 $T > 8$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복게임의 보복기간 문제에서는 먼저 '당기 일탈이득'을 구하고, 다음으로 '보복 1기당 손실'을 구한 뒤, 당기 일탈이득-보복기간의 총손실<0을 만족하는 최소 정수를 찾는다. 무차별이면 충분한지, 협력을 엄격하게 선호해야 하는지도 문제 표현에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일탈이득 8, 보복손실 주당 1이므로 8주는 무차별이고 9주부터 협력이 우월하다.

NoteBase